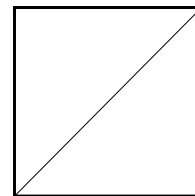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33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9. 29. (제 17 차)	

현대차증권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1. 9. 29.

## 1. 의결주문

현대차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현대차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‘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’에 대하여 현대차증권(주)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(붙임)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(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  
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3호  
「자본시장법시행령」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별표22
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8조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·수령기준) 제1항 및 제4항  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#### 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9.17.) 심의필
- 제18차, 제10차, 제16차 및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(2020.10.14., 2021.5.18., 2021.9.1., 2021.9.15.) 심의필

## <별지>

현대차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# 1. 조치내용

#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##### ○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\*

\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  
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◆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수정 심의

- 조치사유 1. 동 건 수수료 지급은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, 일반투자자의 손해발생 등이 없어 제재효과 및 보호법익이 불분명하고, 타사의 수수료 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일종의 시장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,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제재하기 어려움(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을 지양하도록 하는 계도조치를 전제로 과태료 미부과)

☞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의결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은 없음

- 조치사유 :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
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3호

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8조 제1항 및 제4항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지 위반

- 투자매매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- 현대차증권(주) ○○○○○○팀 등은 국내외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수익증권 등을 인수하고,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이를 재매각(총 △△△억원)하는 과정에서 재매각 상대방인 ●●●●●●●(주) 등 ●개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참여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로 총 ►회에 걸쳐 합계 ▷▷억원(재매각 금액의 ►►%)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(붙임)

## 관계 법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3. 투자자(투자자가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 또는 거래상대방(거래상대방이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22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시행령 제390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 (제7호에 한정한다)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만원

## □ 금융투자업 규정

**제4-18조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·수령기준)** 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(투자자가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거래상대방(거래상대방이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
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### <별표3> 과태료부과기준

#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 기** 위반결과*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- \* 중대 :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금융질서 저해  
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
경미 :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
- \*\* 상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
중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 
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#### 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##### 가. 가중 사유

- (2)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##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**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**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##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□ **금융투자협회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**

**제2-68조(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)**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 됨

2.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